

포스코건설, 엘시티 사고 내고 술접대?

김옥진 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 지청장, 향응 수수 혐의 구속

지난 3월 2일 공사현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해운대 엘시티 사고와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비난을 받았던 (주)포스코건설(대표 이영훈)이 다른 한편으로는 김옥진 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받은 김옥진 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이 11일 구속됨에 따라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현장에 대해 두 달간 작업을 중단시켰지만, 이를 반복하고 약 1달을 앞당긴 4월 6일 작업 재개 명령을 내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지청장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향응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전 지청장 재임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향응을 제공한 3월 12일은 근로감독관과



과태료 3억여원, 사용 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 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철저한 원인조사를 위해 부산 고용노동청이 구성하기로 한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이유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변호를 맡겨 시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첫날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감독 결과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27건,

단체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포스코건설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재현 기자 mahler@

타워크레인 안전 기준 개선방안 마련된다

행안부,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조중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입 등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중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최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던 타워크레인 조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중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행안부는 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수거치대가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

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간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나 프를 이용해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서울시, 정비구역 건축물 전수조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309개 구역 내 5만5000동 대상

서울시가 최근 용산구에서 발생한 재개발구역 상가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정비구역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동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182곳의 건축물 3만6633동 점검을 8월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된 127곳의 건축물 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600동이 육안점검 대상이다. 육안점검 시 한국건축구조기술사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로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를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의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노후 건축물 철거 시까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하고 미이행 시 벌칙조항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또 건축물 철거 시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주기적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 용도 변경 관련 이력관리가 취약한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상화 건축물, 3층 이상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아울러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있는 건물들 대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낡은 상태인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인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건축물대장 등에 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협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 대상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상화 된 건축물 ▲용도변경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이다. 전체 중 20%가량인 1만

등 행정조치를 이행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점검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서울시가 응징한다.

단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임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8일부터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상가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기도 했다. 구청장과 사업시행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과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가 가

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 건물이거나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점검한다. 단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재난 주무부처 행안부는 뭐하나 우정노조, 라돈침대 수거 ‘불만’

주말에 우정사업본부 직원 ‘총동원’

우정사업본부가 16일(토), 17일(일) 주말에 대진 라돈침대를 집중적으로 수거기로 결정했지만 이와 관련 우체국 직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주) 매트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대진침대(주)로부터 수거 요청받은 매트리스를 6월 16·17일 양일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진침대

(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대상 리스트를 토대로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를 투입해 신속히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주말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평일에는 우편, 택배 등 고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인력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말에 우체국 직원들만 동원되는 것에 대해 우정노조 관계자는 “라

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가 작은 크기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꺼리는 직원들도 있으며 국가 재난과 관련된 업무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 왜 과거부 산하인 우정국에서만 수거업무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체국에서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이해가 되나 구지역, 태풍 등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해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인원이 부족해 집배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원 등 모든 직원이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우정사업본부보다 직원이 많기 때문에 수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윤재현 기자

소방시설업계 정보 공유의場

소방시설협, 소방청과 담당자 워크숍

소방시설협회가 전국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12일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태균)는 최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소방관서 소방시설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워크숍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민원담당자들과 소방청 및 협회 관계자를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소방관서 소방시설업 민원담당자의 설계·시공·감리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능력강화와,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정부위탁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개최됐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워크숍에서는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분야 현장 전문가의 강의와 5개 분야의 분임토의, 소방시설공사사업법 관련 질의회신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합동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건축허가소방동의 시 소방

시설 설계도면 검토요령 ▲소방시설 착공신고·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중점 확인사항 ▲감리업무 표준처리 절차안내 및 제언설비 T.A.B 교육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위탁업무 안내 등 다양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소방청과 소방관서 민원담당자들과 협회 정부위탁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한 만큼 소방시설공사사업법과 관련해 담당자들이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됐



소방시설협회가 전국 소방관서 소방시설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방시설업계 정보공유에 나섰다.

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김태균 소방시설협회 회장은 “협회 중점업무인 정부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협회와 소방관서 담당자들과의 소통은 아주 중요하다. 이번 워크숍이 상호 정

보고류는 물론 협력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시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대원 기자

한국안전인증

내달 6일 한·중·러 방폭기술 세미나

한국안전인증은 오는 7월 6일 라마다서울 호텔에서 한·중·러 방폭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방폭인증제도를 비롯하여 한국안전인증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방폭인증마크와 국내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광학기

기, 방폭기기가 소개된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방폭형 변압기 개발사례, S사의 방폭제품 현장 적용 사례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TRCU(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제도와 중국 방폭인증제도 등 해외인증제도도 해외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설명할 예정이다.

방폭세미나 참가신청이나 문의는 한국안전인증(010-9070-2863)으로 하면 된다.

김승교 기자 kimsk@